

ESG 동향 뉴스 클리핑

이슈 검색 기간: 2024.10.4(금) ~ 2024.10.10(목)

제공일시 2024 10 18 Fri

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

문의 02 398 7675

ESG 동향 뉴스 클리핑

이슈 검색 기간: 2024.10.4(금) ~ 2024.10.11(목)

제공일시 2024 10 18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

글로벌 정책

1. EU의 전기차 관세 인상에... 中, 유럽 브랜드 이어 내연차 보복 예고

- 중국이 유럽연합(EU)의 자국산 전기차 관세 인상 결정에 반발해 유럽산 브랜드(과실을 발효해 증류한 술)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시행함
- 중국은 유럽산 농산물과 내연기관차에 대한 보복 조치도 예고하고 있어 양측의 무역 갈등은 고조될 것으로 보여짐
- 중국 상무부는 8일 'EU산 수입 브랜드에 대한 임시 반(反)덤핑 조치 시행 공고'를 내고, 11일부터 EU에서 브랜드를 수입할 때 중국 세관에 30.6~39%의 예치금을 내야 한다고 밝힘
- 상무부는 "EU에서 수입하는 브랜드는 덤핑 문제가 있어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"고 함

[\(조선일보 2024.10.9\)](#)

2. 日정부, 전주기 탄소 배출량 산정 체계 도입한다

- 일본 정부가 원자재 조달부터 제조, 주행, 폐기에 이르는 전 공정에서 배출되는 자동차 이산화탄소량을 산정하는 체계를 만들. 이를 소비자의 차량 구매 보조 정책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임
-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(닛케이신문)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연내 일본산 자동차 제조업체의 전 주기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의 자료를 수집해 실증을 진행하고, 내년에는 이를 계산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보도함
- 이런 움직임은 유럽과 미국 시장의 환경 규제에 대응하려는 측면이 큼

[\(서울신문 2024.10.7\)](#)

3. EU에 부는 그린래시 바람... 디젤차 운행 제한 연기 결정

- EU의 수도 벨기에 브뤼셀이 디젤차량 운행 금지 계획을 2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블룸버그는 5일(현지시각) 전함
- 브뤼셀의 연기 조치는 유럽 대륙 전반에서 불고 있는 그린래시(기후변화 대응에 반대하는 현상) 바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됨
- 브뤼셀 의회는 4일(현지시각) 2025년부터 저배출지역(Low Emission Zone, LEZ)에서 유로5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디젤 차량들의 운행을 금지하는 계획을 2년 연기하겠다고 밝힘

[\(임팩트온 2024.10.8\)](#)

국내 정책

1. 정부, 中 전기승합차에 보조금 안 준다

- 정부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행거리의 하한선을 대폭 높임
- 지난해 승합차를 포함한 수입 전기버스 등록 건수가 처음으로 국산을 앞지른 가운데,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중국산 전기승합차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옴
- 9일 환경부에 따르면,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1회 충전 주행거리(상온 기준)를 승용차의 경우 기존 120km에서 경 소형 200km, 중대형 300km로 상향 조정하기로 함
- 승합차는 80km에서 경소중형과 대형이 각각 300km, 350km로 높아짐. 전기화물차는 변동이 없음
- 정부는 저온 충전거리 기준도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함

[\(서울경제 2024.10.9\)](#)

2. 온실가스 목표관리제, 예상 배출량→절대량 방식 개편

- 온실가스 목표관리제가 현행 '예상 배출량' 방식에서 기준연도를 고려한 '절대량' 방식으로 감축목표 설정 방식이 바뀜
-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(NDC)와 관리업체 목표 설정 적합성이 높아지고, 1년 단위 단년도 감축기간 평가가 5년 단위 다년도로 확대됨
- 이월·차입·상쇄 등 도입으로 기업 온실가스 감축 여건도 개선됨
-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'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 개편 방안 설명회'를 10일 개최한다고 9일 밝혔

[\(이투데이 2024.10.9\)](#)

3. 한일, 메탄가스 감축 협력 확대... "LNG 배출 저감 연합"

- 한국과 일본은 메탄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지지(時事) 통신 등이 7일 보도함
- 매체에 따르면, 세계 액화천연가스(LNG) 수입국 2·3위인 일본과 한국은 전날 LNG 생산국과 소비국이 참가한 가운데, 히로시마에서 열린 생산소비 회의를 계기로 이같이 의견을 모음
- 일본 정부는 한일 연대틀 'LNG 배출 저감 연합'에 간사이 전력과 도쿄가스, 미쓰비시 상사, 규슈전력, 도호쿠전력, 오사카 가스, 미쓰이물산, 히로시마가스 등 22개 기업이 새로 참여한다고 발표함
- 연합에 가세하는 일본기업은 LNG 생산업자의 메탄가스 배출 감축 대책을 점검하고 배출량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압박함

[\(뉴시스 2024.10.7\)](#)

글로벌 기업

1. 현대차 등 북미 연합 충전 네트워크 '아이오나 리차저리' 1호 기공식

- 현대자동차와 BMW, 벤츠 등 7개 완성차 브랜드가 설립한 북미 전기차(EV) 고속 충전 연합인 '아이오나(IONNA)'의 첫 번째 기공식을 함. 아이오나는 1호를 토대로 충전 스테이션을 확충해 미국 전기차 충전에 혁신을 불러일으킨다는 각오임
- 5일 업계에 따르면, 아이오나는 3일(현지시간)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에이펙스에 첫 번째 전기차 충전소 '아이오나 리차저리(IONNA Rechargery)' 기공식을 가짐

[\(더구루 2024.10.5\)](#)

2. 구글 해체되나... 미 법무부 "검색 독점 깨기 위해 사업 분할해야"

- 미국 법무부가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와 플레이앤토어,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등의 사업을 강제로 분할시키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음.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독점적 지위를 해체하기 위해서임
- 구글의 검색 결과와 인공지능(AI)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각종 데이터를 경쟁사와 공유하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음. 이는 역대 빅테크 기업에 대한 제재 중 가장 강력한 조치임
- 파이낸셜타임스(FT) 등에 따르면, 8일(현지시간) 미 법무부는 구글의 검색 독점 해소 방안을 제시한 서류를 연방법원에 제출함. 구글은 법무부의 방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함

[\(중앙일보 2024.10.9\)](#)

3. 세계 최대 축산 기업 JBS, 환경 리스크로 미국 상장 난항... 30조 규모 투자자연합도 "상장 불허하라"

- 투자자들이 세계 최대 축산업체의 기업공개(IPO)를 저지하고 나섬
- 2일(현지시각) 블룸버그는 총 222억 달러(약 29조9411억원)의 자산을 운용하는 18개 ESG 투자자 연합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(SEC) 위원장 게리 겐슬러에게 서한을 발송, 브라질 축산기업 JBS의 뉴욕증권거래소 상장 신청을 불허할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함
- JBS는 1953년 브라질의 소규모 정육점에서 시작된 기업으로 현재 190여개 국가에서 70개 이상의 육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음

[\(임팩트온 2024.10.7\)](#)

4. 日 도요타, 美 공장 전기차 생산 시점 2026년으로 연기... "판매 둔화 여파"

- 세계 최대 완성차 업체인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북미 전기차 공장 생산 시기를 2026년 상반기로 연기할 예정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일 보도함. 북미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둔화한 영향임
- 스코트 바진 도요타 대변인은 "내년 말이 아닌 2026년 초에 SUV 생산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"며 "2026년 말에는 인디애나주 프린스턴 공장에서 생산을 시작할 것"이라고 함
- 도요타 측은 차량 디자인 일부를 변경하기 위해 생산을 연기하게 됐다고 설명함. 생산 시점은 추후 결정할 예정임

[\(조선일보 2024.10.3\)](#)

국내 기업

1. LS전선 225kV 해저 케이블 31km, 세네갈 전력 인프라 혁신에 투입

- LS전선이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세네갈 해저케이블 사업에 참여함
- 지난 5월 제조를 완료해 약 6개월 만에 세네갈에 성공적으로 인도를 마침
- 8일 해양 인프라 개발사인 영국 엔쇼어 서브씨(Enshore Subsea)와 오프쇼어 에너지 등 외신에 따르면, LS전선이 공급한 해저케이블이 지난달 30일 세네갈 다카르만에 도착함
- 이 해저케이블(225kV)은 총 길이만 31km에 달함

[\(더구루 2024.10.8\)](#)

2. 삼성전자, 아이슬란드 히트펌프 진출... EU 공략 확대

- 삼성전자가 유럽 히트펌프 시장 공략에 속도를 냄. 독일, 프랑스에 이어 아이슬란드로 사업 범위를 넓힘
- 6일 업계에 따르면, 삼성전자는 최근 아이슬란드의 대표적인 히트펌프 기업 'Verklagnir'과 파트너십을 맺고, 현지에 상업용과 가정용의 친환경 히트펌프를 공급하기로 함
- 삼성전자는 현지에서 Verklagnir과 함께 소름을 만드는 등 히트펌프 마케팅을 전개할 계획임

[\(아시아투데이 2024.10.6\)](#)

3. 경영권 분쟁에도 신사업 가속... 고려아연, 호주 남반구 최대 풍력발전 '순풍'

- 고려아연이 지분 30%를 보유한 호주 남반구 최대 풍력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함. 영풍·MBK파트너스와 경영권 분쟁을 겪는 와중에도 최윤범 회장이 이끌어온 신재생에너지 등 신(新)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옴
- 8일 고려아연은 호주 자회사 아크에너지가 지분 투자한 맥킨타이어(MacIntyre) 풍력발전소가 지난 4일 첫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힘
- 2022년 3월 착공에 들어가 현재 공정율은 85%가 넘어섰으며, 이번에 1차로 27개의 풍력 터빈의 부분가동을 통해 첫 전력을 생산함

[\(서울경제 2024.10.8\)](#)

4. 삼양사, 2차전지 소재 사업 강화... 강릉에 연 24t 규모 전고체 배터리 소재 공장 이전

- 삼양사가 투자와 자체 개발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 소재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에 속도를 높이고 있음
- 삼양사는 최근 전고체 배터리 소재 전문기업 솔리드아이오닉스가 고체전해질 제조공장을 확장 이전했다고 8일 밝힘. 삼양사는 현재 솔리드아이오닉스의 2대 주주임
-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 위치한 확장 이전한 신공장은 대지면적 4955㎡, 연면적 1046㎡ 규모로 총 투자금액은 약 35억원임. 신공장에서는 전고체 배터리 핵심 소재인 고체전해질과 주원료인 황화리튬(Li2S)을 생산함

[\(인더스트리뉴스 2024.10.8\)](#)

Weekend ESG Insight

이슈 검색 기간: 2024.10.4(금) ~ 2024.10.11(목)

제공일시 2024 10 18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

영국, CCS 프로젝트에 38조원 투입... 기후 목표와 일자리 창출 동시에

- 영국 정부가 탄소 포집 및 저장(CCS) 프로젝트에 향후 25년간 최대 217억 파운드(약 38조2002억원)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음
- 4일(현지시각) 로이터는 영국 정부의 이번 투자가 배출량 감축, 일자리 창출,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음
- 영국 정부는 주요 산업 지역인 테사이드(Teesside)와 머지사이드 지역(Merseyside)에 CCS 클러스터를 조성해 연간 85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계획임. 이는 매년 400만대의 자동차를 퇴출시키는 것과 같은 수치임
- 테사이드는 화학 및 철강 산업 지구이며, 머지사이드는 항구 도시 리버풀을 중심으로 발달한 중공업 및 제조업 중심지임
- 이번 프로젝트 중 하나인 머지사이드 지역의 '하이넷 노스 웨스트(HyNet North West)'는 산업 플랜트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아일랜드 해의 고갈된 가스전으로 저장할 계획이며, 이탈리아의 에너지 기업 에니(Eni)가 주도하고 있음
- 에니 CEO 클라우디오 데스칼치는 성명을 통해 "하이넷(HyNet)은 영국의 핵심 에너지 집약적 산업 지역의 탈탄소화를 실현하고, 지역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할 것"이라고 말했음
- 테사이드 지역에서 추진되는 '이스트 코스트 클러스터(East Coast Cluster)' 프로젝트는 BP와 에퀴노르(Equinor)와 같은 에너지 대기업들이 참여하며,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북해 아래 저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
- 영국 정부는 이 프로젝트들이 약 8억 파운드(약 1조4083억원)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, 4000개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음
-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"(이번 프로젝트들은) 산업을 청정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, 탄소 포집 기술은 투자 유치와 수천 개의 고급 일자리 창출에 있어 엄청난 기회를 제공한다"라고 강조했다
- CCS 기술은 발전소나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지하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비용 문제 등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
- 그러나 영국 지속가능성 매체 에디(edie)는 영국 기후변화위원회(CCC)가 CCS가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 필수적이라며, 이번 결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했음
- 반면 환경단체들은 이번 결정에 반발했음. 영국 그린피스 정책부문 책임자 더그 파르는 "기후위기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정부가 화석연료 산업 연장을 위해 220억 파운드(약 38조7283억원)를 투입하는 것은 문제"라고 비판했음

[\(임팩트온 2024.10.8\)](#)